

공주민제(DCA) 사상·정책에 대한 레드팀(커티스 야빈·기본소득 주장자)의 비판

1. 공주민제(DCA) 개념 요약

- **노동 소멸 전제** – DCA 선언은 기술이 노동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며, 노동이 줄어 임금이 감소하면 소비가 줄어 생산이 목적을 잃는다고 주장한다 ¹. 여기서 위기는 실업률이 아니라 **유효수요의 붕괴**라고 규정하며, 노동 중심 시대의 종언을 전제로 한다 ¹.
- **지분 기반 사회화** – 노동 소멸이 임박할 때 사회 구성원이 생존을 위해 노동자/자본가라는 이분법을 넘어 **지분(권리)**로 기업·공공자산·데이터·AI 수익에 직접 연결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². DCA는 사회화를 국유화가 아닌 **국민유화**(개인 단위 분산 지분권)로 정의하며 ³, 누구도 자본 접근권 0인 상태로 남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⁴.
- **기회자본과 휴만(Humann)** – ‘기초 사회지분, 금융 접근권, 정보/교육 접근권, 시장 접근권, 의결 접근권’ 등 기회자본을 보편권으로 만들어 복지 대상에서 자본 주체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⁵. 기존의 노동자·자본가 대신 분산된 소유·의결·책임을 지는 새로운 주체를 ‘휴만’이라 부른다 ⁶.
- **블록체인·DAO 기반 거버넌스** – 분산 소유를 분산 의결로 고정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DAO를 사용하고, 속의·위임·투표·감사·집행·포획방지 같은 헌정 원칙을 제시한다 ⁷. 위임 상한, 시간 지연, 다중 승인 등으로 포획을 막고 공적 자산 수익을 사회배당 프로토콜을 통해 환류시키려 한다 ⁸.
- **국가 기능의 “자연사”** – 국유화나 혁명이 아니라 기존 국가의 대리 기능(소유·의결·집행)을 사회가 흡수함으로써 국가를 **필요 없어지는 방식**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⁹.

2. 전제와 진단에 대한 비판

2.1 자동화로 인한 노동 소멸 가정의 과장

DCA의 전제는 AI와 자동화가 대부분의 노동을 대체하여 임금소득 기반 소비가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¹. 그러나 이런 단정적 전망은 검증이 필요하다.

- **고용 감소가 아니라 변화** – 공공정책 연구기관 Third Way는 디지털 혁명 후 25년이 지난 지금 미국 경제는 오히려 3,70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600만 개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기술 발전이 노동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직업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지적한다 ¹⁰. 노동 소멸을 전제로 하는 설계는 현실에 비해 과도하게 비관적일 수 있다.
- **UBI 지지자의 비판** – 기본소득(UBI) 연구자들도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예컨대 노동경제학자 플로라 길은 UBI를 도입하기 전에 사람들이 일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진정한 완전고용’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¹¹. DCA가 노동 자체를 버리고 ‘소유자의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제는 이러한 비판과 부딪힌다.

2.2 자본·지분 접근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DCA는 모든 시민에게 사회적 지분을 나누어 주면 소비 기반이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재정적 부담과 지속 가능성** - 기본소득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모틀리 폴(Motley Fool)은 성인 모두에게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면 연간 3조 달러 이상이 필요해 높은 비용과 인플레이션, 노동 의욕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¹². DCA가 제시하는 ‘사회지분’ 역시 실제로는 공공자산·데이터·AI 수익을 전 국민에게 배분하겠다는 것으로, 이런 자산이 안정적으로 공급될지 불확실하다.
- **분산 소유가 경쟁을 약화할 위험** - 하버드 로스쿨 기업지배구조 포럼은 공동 소유(common ownership)가 늘어나면 투자자가 여러 경쟁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등 반경쟁적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소개한다 ¹³. DCA처럼 국민 모두에게 광범위한 기업 지분을 분산시키는 모델은 경쟁 제한과 기업지배권 집중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반독점 규제 논쟁을 벌이고 있다 ¹⁴.
- **평균 시민의 투자·거버넌스 능력 문제** - DCA는 시민 모두를 “휴만”으로 정의하고 소유·의결·책임의 주체로 만든다 ⁶. 그러나 평균적인 시민이 수많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리스크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실에서는 기관투자자나 전문가에게 위임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DCA가 비판하는 **포획**을 재현할 수 있다.

2.3 “국민유화”가 정말 몰수와 다를까?

선언은 사회화를 국유화·몰수와 구분하여 “국민에게 귀속되는 지분권 확대”라고 설명한다 ³. 그러나 현실에서 공공자산의 민간 지분화는 누구의 자산을 누구에게서 이전하느냐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기존 자본 소유층은 자산 가치를 희석시키는 방안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정치적 저항이 예상된다. 커티스 야빈과 같은 반민주주의자들은 이러한 분산 모델을 **사회주의적 몰수**라고 비판할 것이다.

3. 커티스 야빈(네오모나키즘) 입장에서의 비판

커티스 야빈은 민주주의를 비효율적이고 파편화된 제도로 보고, **CEO형 단일 통치자가 지배하는 기업형 국가**를 주장한다. AIU 블로그는 그의 핵심 제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민주주의는 불필요한 관료주의와 단기주의를 낳으며, 단일한 “군주”가 기업처럼 중앙집권적으로 지배해야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¹⁵. 야빈은 선거와 정당정치를 없애고 전문가가 조언하는 **기술관료적** 시스템을 제안한다 ¹⁶.

이러한 시각에서 공주민제는 다음과 같이 비판될 수 있다.

1. **분산 거버넌스의 비효율** - 야빈은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비효율성을 강조한다. DCA는 숙의·위임·투표·감사·집행의 레이어를 통해 모든 시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설계하지만 ⁷, 이는 야빈이 보기에는 관료주의를 더 늘릴 뿐이다. 그는 중앙집중적 의사결정이 혁신과 효율을 담보한다고 주장하며, 복잡한 DAO 구조가 결정 지연과 책임 회피를 초래한다고 비판할 것이다.
2. **소유권 침해와 혁신 저해** - 야빈의 **네오모나키즘**은 강력한 사유재산 보호가 혁신을 촉진한다고 본다. DCA는 자본가의 공을 인정하지만, 지분 일부를 사회에 분산시키고 ‘지배와 책임의 일부를 사회와 공유’하도록 요구한다 ¹⁷. 야빈은 이런 요구를 재산권 침해로 보고, 혁신적 기업가가 위험을 감수할 유인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할 수 있다. 알렉스 타바로크는 야빈 스스로도 **기업을 “작은 군주제”로 착각**하며, 실제로는 시장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을 규율한다고 지적했다 ¹⁸.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인다면, 공주민제의 분산지분 모델도 동일하게 시장규율을 약화시킨다.

3. **탈국가화에 대한 회의** - 야빈은 민주국가 대신 ‘패치워크’처럼 여러 기업국가가 경쟁하기를 원하며 정부 기능을 기업화하자고 주장한다. 그는 그러나 권력 집중이 개인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주민제는 국가를 해체하지 않고 “자연사”시킨다고 하지만 9, 야빈은 오히려 국가 기능을 기업 CEO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재편하길 원하며, 블록체인 기반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가 없다.

4. 기본소득(UBI) 주장자의 입장에서의 비판

UBI 지지자와 사회민주주의자들은 DCA가 기술적 실험에 치중해 시민의 생존권을 **주식 투자**에 맡기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1. **복잡성과 불확실성** - 모틀리 풀은 UBI의 단점으로 높은 비용과 인플레이션, 노동 의욕 저하를 들지만 12, UBI가 행정적으로 단순하고 낙인을 줄여준다는 장점도 언급한다 19. 반면 DCA는 국가 디지털 계정, 블록체인 기반 DAO, 락업 기간 등 복잡한 인프라를 요구한다. 평범한 시민에게 주식·펀드 운용과 거버넌스를 맡기는 것은 행정 부담과 교육 격차를 키울 수 있다.
2. **즉각적 소득 보장 부재** - UBI는 소득을 즉각적으로 지급하지만, DCA의 사회지분은 장기적 축적을 지향하며 **락업(lock-up)** 규칙을 통해 현금화가 제한된다 20. 기본소득 지지자는 경기침체 시 가구의 현금흐름을 보완하는 안전망이 필요하며, 주식 배당만으로는 단기 생계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플로라 길은 UBI가 제대로 설계돼도 교육·주거·건강·재교육 등 공공서비스가 먼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1. DCA는 이러한 공공서비스 강화보다는 금융자산 배당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층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
3. **재분배 효과의 불평등** - Third Way는 UBI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가구에 돌아가는 지원을 줄이고, 높은 비용으로 인해 다른 사회복지 예산을 잠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2. 비슷하게, DCA가 모든 시민에게 일정 지분을 나눠주면 고소득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아 실제 필요가 큰 계층의 몫이 줄어들 수 있다. 자산 배당은 주식 시장 변동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금융위기 때 취약한 사람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5. 거버넌스·기술적 위험과 실행 가능성

1. **블록체인·DAO의 한계** - DCA는 블록체인 기반 자율거버넌스를 핵심 인프라로 삼지만 7, 아직 현실에서 대규모 공적 거버넌스를 블록체인으로 운영한 사례는 거의 없다. 스마트 계약 코드 오류나 해킹으로 자산이 탈취된 사례는 여러 번 있었으며, 프라이버시와 투명성의 균형, 에너지 소비,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야빈의 중앙집권적 모델에서도 기술을 활용하지만, 그는 결정권을 소수에 집중시킨다 16. DCA의 분산 체계는 기술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2. **포획과 대리인 문제** - 선언은 위임 상한·시간 지연·다중 승인 등으로 포획을 막겠다고 하지만 7,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의 권리를 대리투표 기업이나 정치적 조직이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재 기관투자자가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해 기업을 지배하는 현상과 다르지 않다. 하버드 포럼에서 지적되듯 공동 소유는 반경쟁적 행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13, 반대로 규제가 강화되면 분산 투자와 위험 분산 전략이 약화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14. DCA는 이러한 규제 딜레마를 구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3. **전환 과정의 정치적 어려움** - 공주민제는 국가의 대리 기능을 “흡수”해 가며 자연스럽게 전환한다고 하지만 9, 실제로는 기존 세금·연금·기업지배 구조를 대폭 바꾸어야 한다. 자본시장을 통한 분산지분 축적은 단기적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락업 규정을 두고 20, 시민의 자산을 일정 기간 묶어 놓는다. 그러나 긴 락업 기간은 개인의 유동성을 제한하고,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국가 자산의 배당과 투표권 분배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법적 쟁송이 불가피할 것이다.

6. 결론

공주민제(DCA)는 노동·소득 중심 사회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경제적 체제를 모색한 **대담한 제안**이다. 이 선언은 AI 시대의 유효수요 붕괴를 경고하고, 세금과 복지를 넘어 **지분 기반의 권리**를 통해 시민을 기업과 공공자산에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² . 그러나 레드팀(커티스 야빈과 기본소득 주장자)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 **가정의 과장과 실증 부족** - 노동 소멸과 소비 붕괴를 전제한 분석은 현실의 노동시장 변화와 맞지 않으며, 기회 자본의 배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약하다 ¹⁰ .
- **권리·자본·거버넌스 재설계의 역효과** - 시민이 광범위한 기업 지분을 공유하면 경쟁이 줄어들고, 일반 시민이 전문적 투자·의결을 수행하기 어려워 새로운 중개 엘리트가 등장할 수 있다 ¹³ .
- **중앙집권 vs 분산 거버넌스** - 야빈의 네오모나키즘은 민주주의를 “느리고 비효율적”이라고 보며 단일한 CEO형 통치를 주장한다 ¹⁵ . 그의 시각에서 DCA의 블록체인·DAO 시스템은 오히려 혼란과 책임 회피를 초래하며, 강력한 사유재산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본다.
- **기본소득 지지자의 우려** - UBI보다 복잡한 DCA는 즉각적 소득 보장이 없고, 락업 기간·금융 이해의 요구 등으로 취약층에게 불리할 수 있다 ¹² . 공공서비스 강화 없는 지분 배당은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²¹ .
- **실행 가능성과 정치적 저항** - 공주민제는 거버넌스·법제도·재정 등 광범위한 시스템 변화를 요구하지만,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주민제가 제기하는 문제의식 — 기술 발전과 임금소득 약화, 소비 기반의 붕괴, 자본 접근권 격차 — 는 중요한 토론거리다. 다만 해결책으로 제시된 **분산된 지분·거버넌스 체계**는 커티스 야빈 같은 반민주주의자나 기본소득 옹호자 모두에게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현실적 실행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은 검토와 보완이 요구된다.

¹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⁷ ²⁰ manifesto.pdf

<https://leesangyeon69-maker.github.io/DCA/manifesto.pdf>

¹⁰ ²² Five Problems with Universal Basic Income | Third Way

<https://www.thirdway.org/memo/five-problems-with-universal-basic-income>

¹¹ ²¹ Transforming Society ~ A Universal Basic Income is bad for social justice

<https://www.transformingsociety.co.uk/2023/10/19/a-universal-basic-income-is-bad-for-social-justice/>

¹² ¹⁹ Universal Basic Income (UBI): Meaning, Pros and Cons, Example | The Motley Fool

<https://www.fool.com/terms/u/ubi/>

¹³ ¹⁴ Does Common Ownership Raise Antitrust Concerns?

<https://corpgov.law.harvard.edu/2025/01/06/does-common-ownership-raise-antitrust-concerns/>

¹⁵ ¹⁶ The New Monarchy: Exploring Curtis Yarvin's Neo-Totalitarian Vision

<https://www.aiu.edu/blog/the-new-monarchy-the-neo-totalitarian-proposals-of-curtis-yarvin/>

¹⁸ Democracy, Capitalism and Monarchy (Yarvin) - Marginal REVOLUTION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5/01/democracy-capitalism-and-monarchy.html>